FTA, 대선정국 '태풍의 눈' 부상

범여권주자들 반대 단식 등 정국 반전 승부수

이명박·박근혜 "불가피…정치적 접근 안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란이 대선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발전하고 있다. 30일로 예상되는 최종 협상타결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범여권 대선주자군이 찬반 진영으로 극명히 갈라선 채 제각기 캠페인을 주도해나가는 첨예한 대치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수세 국면에 내몰린 범여권 주자진영은 반(反) FTA 기치를 내걸고 '필사적' 기세로 반전을 꾀하기 시작했고 한나라당 주자 진영은 FTA 찬성 기조를 보다 선명히 드러내면서 맞대응 시도하고 있어 전선이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다.

대선주자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그만큼 FTA 이슈의 파괴력을 의식한 측면이 커 보인다. FTA 논란은 사회 전반적으로 지역.세대.소득에 따라 찬반이 팽팽한데다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농민층의 이해가 걸려있는 메가톤급 쟁점 사안. 따라서 개별 유권자의 FTA 찬반입장이 대선후보 지지 여부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선주자군의 공통된 상황인식이다.

'FTA 시간표'와 대선 일정도 미묘하게 맞물려 있다.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돌입 시기가 각 당의 오픈프라이머리 일정(8~9월)과 겹쳐있어 대선판도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범여권 주자진영은 '승부수'를 띄운 분위기다. 탈당그룹의 천정배 의원에 이어 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이 27일 오후 단식농성에 돌입할 예정이고 협상진행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동영 전 의장은 천, 김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하지만 역시 반대쪽의 스탠스를 굳히고 있다.

범여권 주자들의 이런 움직임은 한미 FTA를 고리로 흐트러진 진보·개혁세력의 지지를 다시 모으고 현재의 수세국면을 반전시키는 모멘텀을 만들어보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목할 대목은 FTA 문제가 지지부진한 범여권 통합논의에 속도를 붙이는 촉매제가 될 개연성이 있는 점이다. 천정배-김근태-정동영 등식의 '반 FTA 연대'가 구성이 현실화될 경우 'FTA발' 통합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란 관망이 나온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은 찬성 기조를 보다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FTA가 대미관계의 특수성과 맞물려 있는데다 자신들이 강조해온 경제도약 모델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한미 FTA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도 "그러나 농산물과 육류 등 개방에 취약한 부분은 특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측은 범여권 일부 주자들의 단식농성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표측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이 돼야 하고 쌀은 개방에서 예외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가운데)과 정동채 의원(왼쪽)이 27일 국회 본관에서 한미FTA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김근태 전 의장을 방문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F1 경주장 '환경 복병'

환경부 수질개선·야생동물 보호 등 요구

환경부 장관 "천편일률적 위락단지 반대"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J프로젝트)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경주장 건설에 따른 환경 문제가 제기돼 보완이 시급하다.

더욱이 환경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관광레저시설 개발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환경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절실하다.

환경부는 최근 영암군 삼호면 삼포·난전 일대 간척지 123만평에 F1 경주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관리 결정에 필요한 환경성 검토를 벌여 전남도에 ▲담수호 수질개선 ▲야생동물 보호대책 ▲친환경적인 물·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영암군 삼호읍의 영암호 수변에 들어서는 F1경주장 시설물 및 관객들이 배출하는 오폐수가 담수호의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주변의 친환경적인 물·토지이용 계획도 필요다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27일 제출한 보완대책에서 F1 경주장 오폐수는 인근 대불하수처리장에서 정화한 후 방류하고 저류지를 만들어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경주장을 포함한 부대시설을 자연친화형으로 만들어 주변환경 훼손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F1경주장 건설 관련 부처인 농림부와 건교부는 현재 공유수면(간척지)으로 되어있는 경주장 건설예정 부지를 체육시설 용도로 바꾸기 위한 전남도의 도시계획관리 결정에 동의한 바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27일 "F1 경기장의 환경문제에 대해 환경 주무부처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도 입장에서는 F1 경기장 건설에 따른 여러가지 환경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준비를 해두었기 때문에 F1 경기장의 정상적인 추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지난 26일 "지역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천편일률적으로 관광위락단지만 만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전남도와 일부 시·군이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레저시설 확보에 나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또 "이같은 방식의 개발이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인지 회의를 느낀다"며 "각종 위락시설이 수익이 많다고 너나할 것 없이 개발하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사고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섬유·농업·금융 팽팽한 줄다리기

한·미 FTA 최종담판 이틀째

쌀·쇠고기 핵심 현안 방향도 못 잡아

김본부장 "미 쌀 요구땐 협상 깰 수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최종 고위급 협상 이틀째인 27일 쌀과 쇠고기 등 농산물 초민감 품목의 처리 방향을 놓고 양국 협상단이 첨예하게 맞섰다.

농업 분야 협상 결과는 빠르면 29일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 시점에서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안갯속'을 걷고 있다.

양국은 협상시한인 오는 31일 오전 7시를 사흘여 남겨놓고 농업과 함께 섬유, 금융 등 분야의 고위급 협상을 모두 가동하는 총력 협상 체제에 돌입, 타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90% 끝나고 10%만 남았다"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열린우리당 FTA 특위에 참석해 "19개 분과중 통관, 정부조달 등 10개 분야에서 사실상 협상이 타결됐고 90%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10%가 더 어렵다"고 밝혔다.

남은 10%에 한미 FTA 협상의 성패를 가를 민감한 쟁점들이 모두 몰려 절충이 어렵다는 얘기다. 양국은 이날 섬유·농업·금융 등에서 고위급 회의를 열었으나 팽팽한 줄다리기만을 거듭했다.

농업의 경우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과 리처드 크라우더 USTR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이 협상에 나섰고 섬유는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과 스캇 퀴젠베리 USTR 섬유담당 수석협상관이 힘을 겨뤘다.

◇쇠고기 등 민감품목 평행선=양국은 그동안 고위급 및 실무 협상을 통해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좁혔다.

그러나 쌀이나 쇠고기 등 핵심 민감품목을 둘러싸고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방향도 못 잡고 있다. 우리 협상단은 미국이 쌀을 요구하면 협상을 깰 수 있다는 명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열린우리당 FTA 특위에 참석 "쌀 같은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요구가 있을 때는 결렬될 수 밖에 없다"며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쇠고기 뼛조각 문제의 처리 방향도 관심거리다. 미국 협상단의 고문 자격으로 방한중인 패트릭 보일 미국 식육협회(AMI)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FTA가 체결되려면 상대국에 의미있는 시장 접근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쇠고기 검역 문제는 FTA의 의제는 아니지만 장관급에서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박준영 전남지사 10억 2천만원

4억 증가…해남 김석원 도의원 34억원 최고

전남공직자 재산공개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3억 9천만원 증가한 10억 2천만원으로 신고됐다.

전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박 지사를 비롯, 고위공무원과 도의원 등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대상자 57명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했다. 박 지사는 부동산 가액증가분 4억원을 포함해 10억 2천만원을 신고했다.

가장 많은 재산 신고자는 김석원 도의원(해남)으로 34억원을 신고했고, 가장 적은 재산은 강우원 도의원(영암)으로 마이너스 9억원이었다.

김종철 도의회 의장은 3천만원을 신고했으며 지난달 부임한 이상면 정무부지사는 12억 6천만원을 처음 신고했다. 이번 공개대상자 57명 가운데 30명은 재산이 증가했고 23명은 감소, 4명은 변동이 없었다. 재산증가자가 많았던 것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부동산 가액을 변동 신고토록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